

광주·전남 때이른 폭염...식중독 ‘초비상’

환자 1,198명 전년대비 201% ↑
목포, 118년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
온열 질환자·가축폐사도 잇따라

한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가축피해도 잇따라 축산 농가들이 ‘폭염과의 전쟁’을 치

르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건으로 지난해 6월(29건)과 비교해 1.8배로 증가했다. 식중독 환자는 지난달 1,198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6월(398명) 대비 2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식중독 발생 환자는 2010년(1,908명) 이후 최근 10년 사이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가장 많은 식중독 발생이 신고된 시설은 음식점이며, 20건이 발생 353명의 환자가 나

왔다. 학교는 9건(276명), 학교 외 집단급식에서는 17건(211명)이 신고됐다. ‘기타’ 시설에서는 7건이 발생해 35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일찍부터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6월 식중독 발생이 급증 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목포지역은 118년 관측사상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고, 광주의 열대야는 지난해(7월 13일)보다 16일 빠르게 찾아왔다. 전남에서는 지난해(7월 6일) 대비 9일 빨랐다. 때이른 고온의 원인은 6월 하순부터 판 공기

를 동반하던 상층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하고, 이와 동시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발생했다는 기상청의 분석이다. 여기에 무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광주 5명·전남 53명이다. 가축폐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나주·영암·무안 지역 농가 36곳에서 가축 7,963마리가 폐사했다. 가축별로 닭 4,400마리, 오리 3,400마리, 돼지 163마리 등이

다. 어패류와 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부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영양분과 소화가 잘되는 사료 공급으로 가축의 기력 향상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때이른 더위가 동반되면서 식중독 발생도 많아진 것 같다”며 “오후에는 특히 기온이 높게 발생하고 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지난달 30일부터 폭염 특보가 발령됐다. 광주와 담양·나주·화순·순천·보성·구례·곡성에 폭염 경보, 전남 나머지 시·군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임채민 기자



광주대 물놀이장 지난 9일 오전 광주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된 특별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생훈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 안된다”

“정부 논의기구 믿을 수 없어”

일제 치하 강제 노역 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을 이끈 시민단체가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매각 명령) 관련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부가 외교 갈등 심화 우려에 급히 만든 논의기구의 구성·배상 해법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외교적 해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논의체로,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 학계 전문가와 언론·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첫 회의는 지난 4일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매각)를 위한 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소송을 지원한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각

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1·2심에서 법원은 모두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통상 재판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무렵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외교부가 민관협의체의 성격과 운영 방안, 역할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정해진 어떤 일정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답을 내려놓고 ‘피해자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며 협의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 /임채민 기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학교 이사장 징유

행정실 직원에게 집안일 지시

행정실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이사장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실장 B씨(61)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채용된 C씨가 행정 업무를 보조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 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 이사인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행정실에서 일하던 C씨에게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B씨 역시 C씨에게 “행정실로 출근하지 말고 그날그날 이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고, C씨는 이사장 어머니 집으로 출근해 운전, 은행 심부름 등을 해왔다. 그러나 C씨의 월급은 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 인건비·운영비)을 신청해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B씨는 A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이륜차 집중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심야 시간에 굉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개조 이륜차이다. 또 미인증 등화 장치설치, 경음기 추가, 번호판 불량 이륜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무등록 운행차(번호판 미부착)도 적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형사처벌·행정처분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소음초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상반기 총 20회 합동 단속을 실시해 367대를 적발했다. 등화장치 269대, 불법튜닝 63대, 번호판 불량 204대, 기타 67대이며 특히 소음 초과 차량도 12대를 단속했다. /임채민 기자

www.dklmc.co.kr

도경건설 주식회사는

도로포장 전문 업체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특히 30여개를 등록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에 9가지 기술을 등록,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결빙방지재를 생산하는 라인을 완성하여 SOC기술마켓에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한국형 포장기술을 완성에 나일 것입니다.

OK

길 만드는 사람들

도경건설(주)

DOKYEONG Construction CO.,LTD

대표이사 신현국 박정연

Tel. 061 _ 393 _ 3315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10

결빙방지재

(Grikol)

균열보수재

(DK-Creak Sealer)

반강성주입재

(Semi-rigid Pave)

고성능개질콘크리트

(BLMC)